

김대준/박정우	daejun.kim/jw.park@truefriend.com
유종우/최문선	jongwoo.yoo/ moonsun@truefriend.com
김진우	jinwoo.kim@truefriend.com

## [긴급 진단] 미국 통상 압박과 대응 전략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 대미 수출 의존도는 이미 낮은 상황  
 투자심리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음

### 다시 시작된 보호무역

미 보호무역주의 강도는  
 연초부터 강해지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다. 태양광, 세탁기에 이어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관세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결과는 4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향후 일정도 가늠지 않다. 굵직한 일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4월 15일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다음으로 올해 여름에는 통상법 301조항에 따라 지난해 8월 시작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도 공개된다. 여기에선 미국 측 손실규모와 대응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올해 유독 강해진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고 당선된 트럼프는 보호무역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에 보호무역주의는 가장 강력한 선거용 캠페인이다.

둘째, 통상법 232조항과 301조항을 토대로 시작된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해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마침 작년부터 시작된 굵직한 조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된다.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를 바꿀 근거가 마련되는 중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재정적자를 보호무역으로 커버할 경우, 쌍둥이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외쳐왔다. 신년 의회 연설에서 1.5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부예산 3,000억달러 증액 등 정부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작년보다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반기에 굵직한 이슈가 포진되어 있어 당분간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보호무역 영향력은 제한적

**보호무역주의 영향력을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음**

미국은 교역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6개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바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 조선, 반도체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 기업 M&A를 제한하는 미국내 해외 직접투자 위원회(CFIUS) 개혁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산업에서 한국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도 직접적인 타겟은 중국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정책이 없을뿐더러 그간 보호무역주의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무역 압박이 거세져도 실제 영향력에 대해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호무역은 미국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6대 제조업 품목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다. 상무부의 고민은 단순 규제, 예를 들어 해당 국가 관세 부과 등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번 철강, 알루미늄 규제 권고안에는 수입량 쿼터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관세 및 쿼터량 부과는 미국 제조업의 원가를 올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작년 국경세 논의도 미국 소매업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득세하면서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둘째,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미국 내 직접투자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역학관계상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긴 어렵다. 미국 정부에서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상무부 장관 월버 로스와 미국 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의 입지는 자유무역주의자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 밀린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대상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서 중국 측이 2,500억달러 상당의 교역 선물을 준 이후 무역 분쟁이 잠잠해졌던 것과 유사한 그림이다.

물론 현재 상황은 보호무역주의가 구체화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무역이 글로벌 경기의 확장국면 초기에서 교역량 회복으로 개선되고 있는 수출 경기를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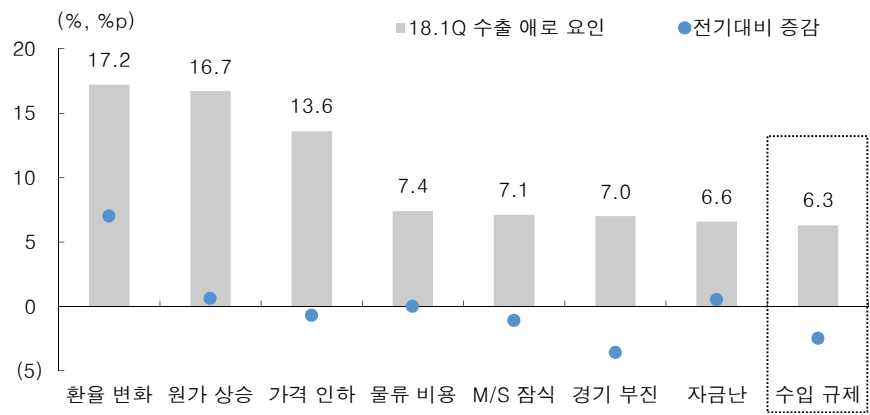
### 주식시장: 일시적으로 변동성 확대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주 심리에 부정적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 연휴 전에는 변동성이 문제였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영원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뒤통수를 친 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 상무부는 16일 통상법 232조항에 근거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결과가 나오는 4월 11일까지 대미 수출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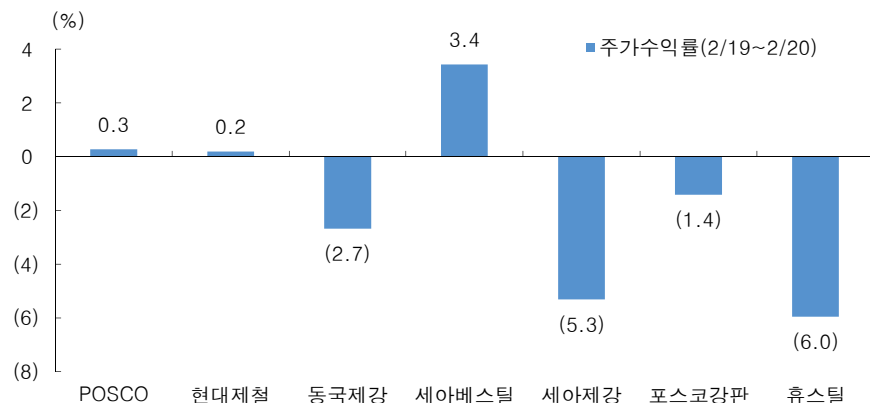
사실 한국 수출기업은 올해 수출 애로 요인으로 수입국의 무역 규제를 크게 생각한 적이 없다. 무역협회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결과를 보면 수입국의 규제는 오히려 전기보다 관심에서 멀어졌다. 매년 그렇듯이 환율 변화와 원재료 비용이 더 큰 이슈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의 행동이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시장은 변화를 즉각 반영했다. 규제에 직접 노출된 철강주는 부진한 흐름이다. 다만 주가 낙폭은 대미 의존도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이다.

[그림 1] 2018년 1분기 수출 애로 요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주요 철강주의 주가수익률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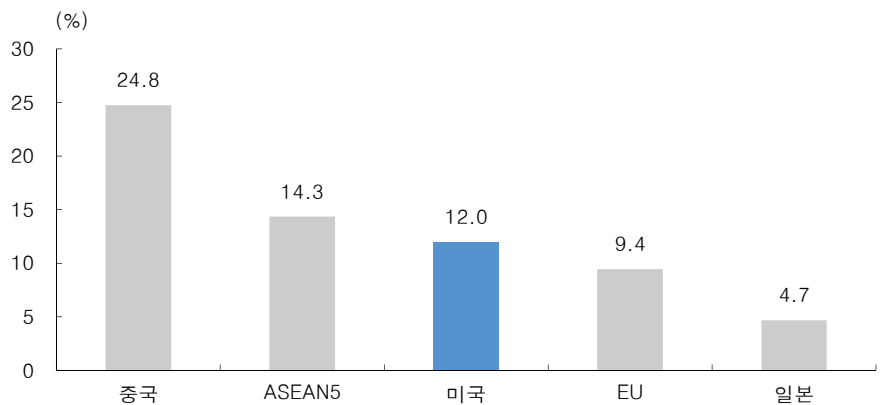
**대미 수출 의존도는  
이미 낮은 상황**

일단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야 한다. 향후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수출은 분명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만 그 강도가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한국 수출이 예년과 달리 미국에 올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다. 작년 한국 수출액은 5,737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5.8% 증가해 2년만에 (+) 증가율로 돌아섰다. 대미 수출은 686억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반면 1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14.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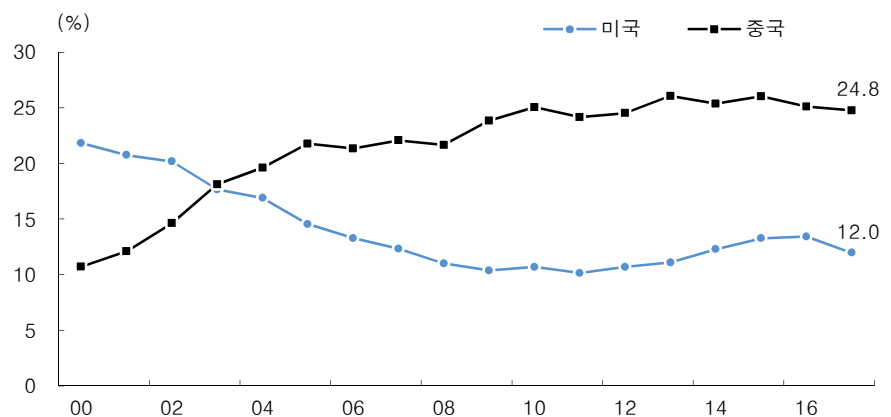
대미 수출 비중도 다시 낮아지고 있다. 대미 수출은 2000년 전체 수출의 21.8%를 차지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다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방향이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은 이미 중국과 아세안 5개국으로 변한 상황이다. 미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



주: 2017년 기준, 아세안5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자료: 관세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수출 비중 추이: 미국 vs. 중국**



자료: 관세청, 한국투자증권

**주요 수출 품목은  
규제와 무관한 상황**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을 봐도 규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부품, 핸드폰, 반도체 등을 수출한다. 그런데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무관세로 거래된다. 일례로 반도체는 1996년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국제적으로 관세가 없다. 자동차도 한미 FTA에 의해 0% 관세로 수출된다. 핸드폰과 석유제품 등은 미국내 산업 구조상 수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므로 주력 수출 품목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최근 이슈가 된 철강제품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일단 대미 수출비중이 낮다. 2017년 기준으로 철강관, 철강선, 철강판의 수출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2%니, 계산상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가 된다. 총수출 5,737억달러 중에서 0.5%인 29억달러만 규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다. POSCO가 작년에 기록한 매출액 60조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때문에 철강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잘 팔리던 제품이 특허 침해 소송에 말려 들어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애플의 특허 침해로 판매가 금지된 갤럭시 S2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정황상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정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의 대응은 그 다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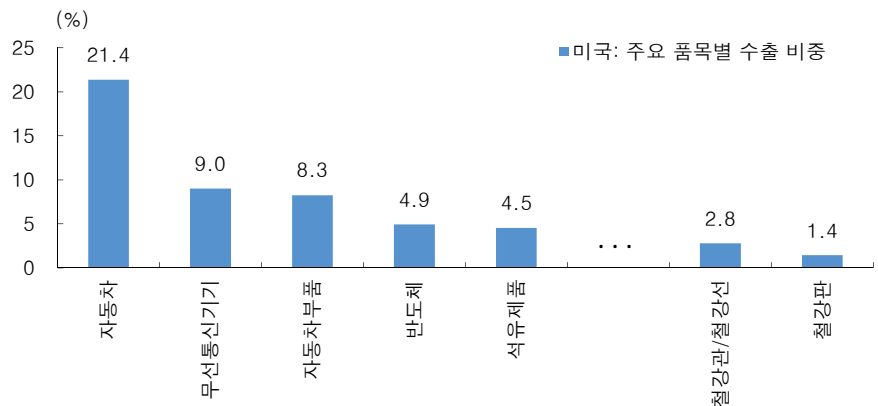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미국	중국	아세안5	EU	일본
1위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2위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판
3위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4위	반도체	석유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5위	석유제품	석유제품	기구부품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주: 2017년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대미 수출 비중: 주요 품목별**



주: 2017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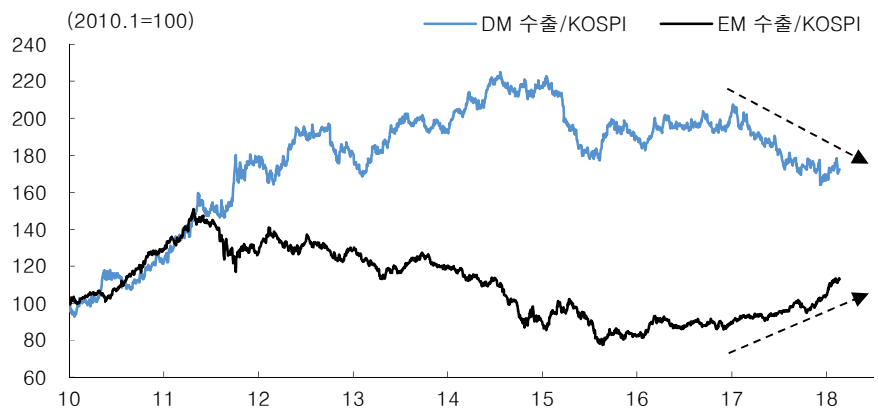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대미 수출주를 대신해  
EM 수출주에 관심**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별로 없다. 실체는 없고 소문만 무성해 펀더멘털 훼손 논의를 하기에 너무 이르다. 그러나 시장에선 펀더멘털과 무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뉴스가 투자심리를 흔들기 때문에 대미 수출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대미 수출주에 대한 비중을 중립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다. 아직 펀더멘털엔 이상이 없어 비중을 중립 이하로 내릴 필요는 없다. 비중의 재조정 여부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결정이 확인된 이후에 고민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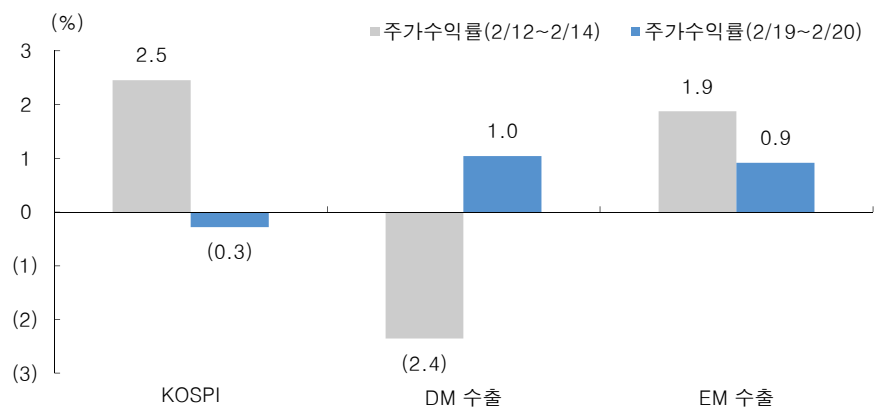
반면 신흥국 수출주에 대한 비중은 늘리는 게 좋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각종 호재들이 관련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약재에 노출된 선진국 수출주보다 신흥국 수출주의 성과가 계속 좋은 상황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기에 신흥국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6] BM대비 수출주 상대강도: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수출 스타일의 최근 2주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업종별 영향 : IT, 자동차, 철강

### 1) (유종우) IT 하드웨어 : 부품 영향 없으나 완제품 일부 증장기적 영향

반도체는 무관세,  
디스플레이도 영향 없을 듯.  
그러나 휴대폰은 증장기적  
통상압력 노출, 가전은  
이미 현지공장 가동 시작

IT하드웨어 섹터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크게 부품과 완제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부품 산업의 영향을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부품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전세계 무관세 제품으로 모든 국가가 무관세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합의를 깨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낮을 뿐 더러,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규모가 크고 수출 비중도 높아서 중국과 한국에 통상 압력을 높이고 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이 입을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도 미국 내 경쟁업체가 없어 보호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미국 내 기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완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완제품의 경우 부품보다는 통상 압력의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완제품이 휴대폰과 가전인데, 휴대폰의 경우 애플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 애플이나 애플의 제조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기업은 미국 내 생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휴대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애플의 제조 아웃소싱 기업인 폭스콘이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미국 내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한국 및 중국 휴대폰 업체들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증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생산기지 재배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가전의 경우 이미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미국 가전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가전 조립공장이 세워졌고 최근 가동도 시작했다. 가전의 경우 생산조립 공정이 단순해 조립공장 건설 비용이 크지 않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높지 않다. 때문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2) (김진우) 자동차 : 관세 영향 크지 않아, 비관세 장벽 요인이 중요

2.5% 관세 여부보다는  
환율, 경쟁력, 비관세 장벽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

자동차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장벽보다 비관세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한미 FTA로 인해 2016년 3월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는 2.5%에서 0%로 철폐되었고, 수입 관세 또한 2012년 발효 당시 8%에서 4%로 즉각 인하된 뒤, 2016년 3월부터 0%로 철폐됐다.

그러나 대미 수출관세가 2.5%에서 철폐된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세단 위주의 라인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2.5%의 관세 유무는 판매량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다. 관세 부활 여부보다 유효 경쟁을 위한 SUV 투입 여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일본업체와 다시 박빙의 점유율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2.5%의 관세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한편 통상압력 관련해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출 통관 심사 강화, 연비 규제 인증 강화,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화, 리콜 심사 강화, 반한 감정 조성 등 관세 장벽이 아니더라도 대미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도입될 경우 자동차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 (최문선) 철강 : 영향 적어, POSCO 미국 수출은 전체 출하량 1% 미만

한국 철강산업 영향 미미.  
POSCO 미국 수출은  
전체 출하량의 1% 미만

금주 초반 저녁 뉴스의 머릿기사를 장식한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사실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필두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과 관세 부과를 남발하고 있다. 다만 부과된 관세율이 53%로 초고율이라는 것은 예상 밖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의 초고율 관세 부과가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수혜도 크지 않다.

다만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관세가 부과된 12개 국가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0%로 작지 않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미국이 얻는 이익은 의미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철강 산업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제재를 통해 미국의 철강 산업이 얼마나 큰 수혜를 얻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의 철강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의견은 워낙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져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실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업체별로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수출량이 전체 출하량의 1%에도 미치지 않는 POSCO가 이번 관세 부과 이슈에 있어서 영향이 가장 작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경우는 1)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강관과 2) 미국향 강관이 영향을 받는데 전체 출하량의 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제철에 미치는 영향이 POSCO보다는 크나 절대적인 영향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표 2> 한미 통상 이슈로 인한 업종별 영향

섹터	담당자	영향
반도체	유종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는 전세계 무관세 거래 제품으로 미국 통상압력 발생 가능성 없음</li> <li>- 미국도 반도체 산업의 수출 규모가 커서 상호 관세 부과 시 불리해 질 수 있어, 관세 부과 가능성 낮음</li> </ul>
자동차	김진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대미 수출관세 철폐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감소. 즉 판매량에 있어 관세 부활여부보다 유효경쟁을 위한 SUV 투입 여부가 더 중요한 시점</li> <li>-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업체와 점유율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2.5%의 관세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li> <li>- 수출통관 심사강화, 연비규제 인증강화,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화, 리콜 심사 강화, 반한 감정 조성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은 위험요인.</li> </ul>
기계	조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있는 영향 없음</li> <li>- 두산밥캣은 미국회사, 기타 중장비업체들도 미국내 경쟁력 높지 않음</li> <li>- 진성티씨와 같은 부품업체들도 현지 반제품 공장 확보. 압력 세지면 현지 조달/생산 가능성 높음</li> </ul>
철강	최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53% 관세 부과, 17년 수입량의 63%로 쿼터 제한</li> <li>-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량 3위국가, 대미 철강 수출량은 생산량의 5%로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과 자동차용 강판은 P와 Q 모두에 부정적</li> <li>- 부정적인 이슈지만 미국 철강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져 미국 가격 강세로 전반적인 철강 가격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li> </ul>
디스플레이	유종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스플레이 패널이 미국에 직접 수출되는 물량이 크지 않고 대부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제조 공장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미국에 수출됨</li> <li>-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아 관세 부과 가능성 낮음</li> <li>- TV, 모니터 등 완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율을 높일 경우 가전과 마찬가지로 미국내 조립공장 설립 등으로 대응 가능</li> </ul>
광고/미디어	최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 없음</li> <li>- 광고 업체의 경우, 캡티브 업체의 사업현황에 따라, 미국 매출총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li> </ul>
섬유/의류	나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 없음, 패션 브랜드는 내수 산업 위주로 형성</li> <li>- 의류 OEM은 생산 기지 대부분 동남아, 중미로 이전</li> <li>- 또한 미국 의류는 수입에 전적으로 이전, 통상 압력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li> </ul>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